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9부 능선 넘었다

과기부, 우선협상대상자 ‘나주’ 선정
부지안전·정주여건·주민 수용성 강점
이의 신청 거쳐 내달 3일 최종 확정
1조2천억 규모 내년 예타·2027년 착공

전남도가 1조2천억원 사업비 규모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한 ‘9부 능선’ 을 넘으며 최종 확정을 눈앞에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1순위 후보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주를 선정 가운데 10일 간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 번이 없는 한 오는 12월3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이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 참여한 나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나주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평가는 기본 요건 (40점), 입지 조건 (50점), 정책 부합성 (10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과기부는 2순위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전북 군산 시가 이의 신청을 제출한 만큼 12월3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 왕곡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1순위 후보지로 나주를 선정한 24일 시설이 들어설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 전경.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 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평가에서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는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나주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지

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 추가 확장이 용이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근 실거주자의 100% 동의를 얻었고 12만 나주시민 전체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주민 수용성을 갖춰 국가 대형 연구시설 조기 건설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 에너지공대가 핵융합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구축 중인 만큼 향후 핵융합 실증·핵심 소재 연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등 700여개 에너지 기업이 집적화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이번 공모에 참여한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점했다.

과기부는 12월 중 최종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김재정 기자

알림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15강

이병훈 前 국회의원 ‘한국 경제와 안보’

오늘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15강을 25일 개최합니다.

15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이병훈 (사진)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갑니다.

이 전 의원은 고려대 행정학 학사, 전남대 행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문화체육부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이자 정치인입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역임하며 광주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초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12대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광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시=2025년 11월25일(화) 오후 6시
▲장소=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
▲강사=이병훈 前 국회의원
▲주제=한국 경제와 안보

군공항 이전 반대 무안 단체도 “4자 협의 환영”

민간 이전시기 특정·1조원 담보 보장
인센티브 등 TF 논의 ‘4대 요건’ 제시
전향적 입장 피력…6자 TF 결과 주목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해온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가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3개 지자체장이 4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 범대위는 “이번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요구안이 어떻게 충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6자 TF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가 제시한 6자 TF 논의 4대 요건은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시기 특정 ▲광주시 1조원 규모 지원책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범·제도적 담보 보장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 ▲소음 완충지역 최대 확보 등이다.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범대위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점이라고 명문화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안군민의 신뢰 회복에도 부합하고 더 나아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해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이상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허울 뿐인 지원 의지 표명 만으로는 군민들의 불안·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1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변동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국비·시비 재정 분담을 명문화하는 방식 등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광주광역시

빛의 혁명, 기억과 연대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

12월 1일 ~ 12월 12일

2024년 12월, 광주가 보여주었던 민주주의 회복 노력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이어 갑니다.

대통령이 빛나는 기록도시 광주

2025. 12. 12. 소년이 오다

지속 민주주의 고립과 광주 정신

응원봉 제2의 햇볕